

## 13 지방직 사회 강평(A책형 기준) [김대근 강사]

먼저 힘든 수험과정을 보내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지방직 사회는 법과 정치 10문제, 경제 5문제, 사회문화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치와 사회 문화에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출제 경향을 보이며, 그 지문들도 세밀한 지식을 요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난이도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보다 훨씬 높았고, 일부 사회 문화편의 문제는 자료해석형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험생은 고득점은 고사하고 절반 정도 맞추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예시문제로 나왔던 사회문제를 신뢰한 수험생과 강사님들은 앞으로 난이도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택과목에 대한 시간배분은 10분에서 15분으로 보았을 때 사회를 선택하신 수험생은 적어도 20분은 소요될 것 같아 전체적인 시간 안배에서 불리하였습니다.

다만 국어, 영어, 국사의 점수가 합격권에 근접한 수험생은 조정점수제로 인하여 자신의 사회 점수는 다른 선택과목들에 비하여 상승하게 되어 오히려 유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년 시험에도 올해처럼 국가직과 지방직의 출제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우선 범위를 넓게 잡고 중요 테마 위주의 1차 학습과 심화된 내용의 2차 학습을 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13 지방직 사회 해설

#### [1번 해설] ③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신체적, 문화적 식별가능하고,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거나 자원 동원 능력이 떨어지며,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며, 집단내의 소속의식의 특징이 있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다. ③ 사회에서의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하여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번 해설] ①

A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이고, A국이 제시한 정책들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 [3번 해설] ④

ㄱ.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이나, 성남시 분당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ㄴ. 주민소환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이다.

[4번 해설] ④

④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상실되어 무효가 된다.

[5번 해설] ①

(가) 실증적(양적) 연구방법 - ㄷ, ㄹ

(나) 해석적(질적) 연구방법 - ㄱ, ㄴ

[6번 해설] ③

①②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④ 일정한 요건하의 외국인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피선거권 X)과 주민투표권은 인정된다.

[7번 해설] ②

ㄴ.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의와 양형에 관여할 수 있다. ㄷ. 국민참여재판은 민사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8번 해설] ④

A - 주식, B - 채권, C - 예금

①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채권이다. ② 기대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주식이다. ③ 정부, 특수법인이 많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채권이다. ④ 이자를 수취하는 금융상품은 채권과 주식이다.

[9번 해설] ③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 유소년 인구는 14세 이하 인구를 의미한다.

①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생산 가능 인구 × 100]

②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유소년 인구(14세 이하 인구) × 100]

③ 2000년 고령화지수가 33%이므로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65세 이상)은 33명이므로 3분의 2보다 작다.

④ 고령화 지수에서 노년부양비를 나누면 [생산 가능 인구/유소년 인구] = 66.3 ÷ 15.0 = 약 4.4 이므로 생산 가능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4배가 넘는다.

[10번 해설] ④

① 상층은 80/100, 중층은 160/200, 하층은 85/100이므로 계층 세습 정도는 하층이 가장 심하다.

② (T + 10)년에서 자녀 중

세대간 상승이동 : 부모(하) ⇒ 자녀(중 or 하) = 5+5 = 10

부모(중) ⇒ 자녀(상) = 30

세대간 하강이동 : 부모(상) ⇒ 자녀(중 or 하) = 7+3 = 10

부모(중) ⇒ 자녀(하) = 10

따라서 세대 간 상승이동이 세대간 하강이동보다 많다.

③ T년은 상층( $80+10+5=95$ ), 중층( $15+160+10=185$ ), 하층( $5+30+85=120$ )이므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이고, (T + 10)년에는 상층( $90+30+5=125$ ), 중층( $7+160+5=172$ ), 하층( $3+10+90=103$ )이므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④ (T + 10)년에서 중층 부모의 자녀 중 현재 상층 인원이 30명이므로 T년과 (T + 10)년 사이에 중층 부모의 자녀 중 상층으로 세대 내 이동한 사람의 최대치는 30명이다.

[11번 해설] ①

① 의료급여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공공부조를 의미한다.

②③④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12번 해설] ④

의원내각제의 의원의 임기도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져 있다.

[13번 해설] ③

③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14번 해설] ①

① 환율 하락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보다 원-유로 환율이 더 많이 떨어졌으므로 미국보다 유럽에서 원화 가치가 더 높게 올랐다. 그러므로 달러를 차입한 한국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② 유럽을 여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비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③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④ 국내 물가는 하락할 것이다.

[15번 해설] ③

저개발 농업국이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후에도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된다는 종속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이는 경제적 격차에 따른 남북문제(남반구의 후진국과 북반구의 선진국 간의 경제문제)를 말한다.

[16번 해설] ②

② 대통령 선거의 경우 기탁금은 과거에는 5억이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8. 11. 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을 내린 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3억원으로 변경되었다.

[17번 해설] ③

A로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 B는 수요증가 + 공급의 증가(단 증가의 폭은 동일하다), C는 공급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① X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상승은 공급 감소이다.

② 소비자의 소득 수준 감소는 수요 감소이다.

③ X재의 생산기술 향상은 공급 증가이므로  $E \Rightarrow C$ 로의 변화를 초래한다.

④ 모두 X재의 수요 증가를 수반한다.

[18번 해설] ②

A는 완전경쟁 시장, B는 독점적 경쟁 시장, C는 과점 시장, D는 독점 시장

- ① 기업이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은 독점 시장
- ②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
- ③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 ④ 소비자 잉여가 아니라 생산자 잉여가 가장 큰 시장은 독점 시장

[19번 해설] ④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1헌마718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판사, 검사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 이는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 ① 행정부가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 ②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필요없다.
- ③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데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재판부는 최종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단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의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번 해설] ①

ㄱ 신민형, ㄴ 향리형, ㄷ 참여형

- ① 신민형은 주로 권위적인 정부형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치문화 유형으로 상위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참여자로서의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 정책형성과정에는 소극적이나, 정책집행과정에는 적극적이다.
- ②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정치적 역할이 미분화된 전근대적 전통 사회의 특징적인 정치 문화로서 시민은 정치 공동체에 대하여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참여에 소극적이다.
- ③ 참여형 정치 문화는 민주 사회의 특징적인 정치 문화로서 시민은 정치 공동체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④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정치문화 유형은 향리형이다.